

송 지사 국가예산 확보에 '비지땀'

지엠 군산공장 재가동 주력산업 체질개선 위해 산업부·해수부 등 중앙부처에 반영 건의

송하진 전북도 지사는 지난 16일 이어 30일, 산업부 등 3개 부처를 릴레이 방문하는 등 중앙부처 설득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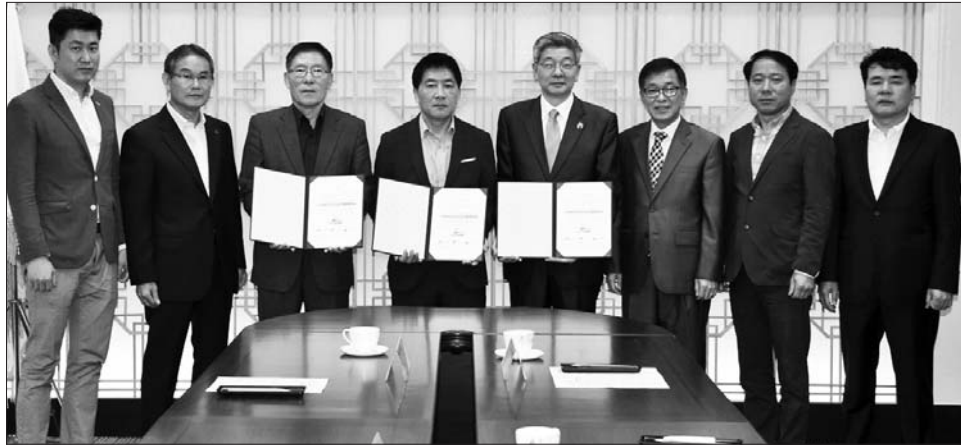
송 지사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GM군산 공장의 조기 재가동 및 주력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성장동력사업의 국가예산 확보 등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는 이번 주가 기재부에서 각 부처에 실명을 배정하는 중요한 시기여서 전라북도 주요 현안사업 예산확보를 위해서 문턱이 닳도록 부처 방문활동에 발 벗고 나설 예정이다.

송 지사는 우선 지난 4월 5일 고용·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 지원 후속조치 건의사업이 부처예산에 필수 반영되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산업부 문승욱 산업혁신성장실장을 만나 한국GM 군산공장이 조기 재가동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자율(군집)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의 예타 우선순위 선정과 군산조선소, GM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익산 제3공단 내 패션단지 투자

익산시와 중국청도금주공예품유한공사(골든벨)가 익산 제3일반산단단지 내 패션단지 투자를 위한 협약을 지난 30일 체결한 후 김철모(중앙 오른쪽) 익산시장 권한대행과 문원영(중앙 왼쪽) 전북도 투자유치과장, 이덕호(중앙) 골든벨 대표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익산시청 제공)

위급한 지역경제가 시급히 회복될 수 있도록 2019년 국비 455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조선해양산업 위기극복과 전북(새만금)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의 블루오션인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분야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플랫폼 구축' 선도 사업비 40억원도 적극 요청했다.

이어 해양수산부 김명준 장관을 만나,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원을 약속한 '금란도 개발 사업'에 대한 해수부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적극 강조했다.

자동차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항 항만종사자의 수입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항 자동차 화물배정' 및 '항만시설 사용료 100% 감면'을 건의했다.

서해안권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시설설계용역비로 국비 14억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의 부대시설 규모 확대 및 민자 사업의 국비 재정사업으로의 전환과 진입도로·호안 등 기반시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2019년 국비 1,000억원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나종민 제1차

관을 만나,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이하여 전라도 3개 시도를 중심으로 한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위한 국비 5억원과 소리에 강점이 있는 전라북도에 한국적 음악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소리창작원 건립'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타 통과를 적극 건의했다.

아울러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된 태권도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태권도 라키비움 구축'을 위한 2019년 국비 5억원, '태권도 공연콘텐츠 제작'을 위한 국비 7억원이 부처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진성 기자

개성공단 기업들 "북미회담 이후 방북 신청"

통일부장관 면담 즉각 신청 보험금 반환 등은 TF서 논의

개성공단 기업들은 지난 30일 공단 재개 실사를 위한 방북 신청을 북미정상회담 이후인 6월께 하기로 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열린 월례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신한용 비대위원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남북이 경협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데 우리가 먼저 방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경협사무소도 결국 북미회담의 추이를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비대위는 기계 설비 확인 등을 위해 6월말로 예상되는 장마철 이전에는 방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이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해 즉각 면담 요청을 하기로 했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 중으로 공문을 띄워서 장관 면담을 신청할 것"이라며 "공문을 보내면 통일부 쪽에서 회신이 올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는 향후 법제도 정비, 보험금 반환, 복구비용 등 공단 재개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개성공단 재개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다.

TF는 총 6개 분과로 정해졌으며, 유창근 에스제이테크 대표가 단장으로 선임됐다. TF는 다음달 3일 첫회의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다음달 14일께 개성공단 기업 124개 전체를 초청하는 워크숍을 열고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개성공단 참여 기업들은 이날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명시적 약속과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새만금잼버리 성공 지원

이주영 의원, 특별 대표발의 조직위 설립 등 법적근거 마련 새만금조기개발 등 효과 기대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새만금 세계잼버리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이 1일, 국회 스카우트의원연맹 회장인 이주영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발의된다.

도는 지난해 9월 특별법 초안을 마련하여 여성가족부, 한국스카우트연맹(이하 '한국연맹') 등과 13차례의 협의과정을 거쳐 법안 내용을 확정,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해 국회 스카우트연맹 의원, 여가위 위원, 전북 지역구 의원 등에 대한 사전설명 과정을 거쳐 찬성 의원 20여명으로 법안을 발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안협의의 막바지까지 조직위원회 구성, 잔여재산 귀속 등에 대해 한국연맹과 정부 간에 의견 차이를 보였으나, 한국연맹은 신속한 법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부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잼버리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직위원회 설립, 기금설치,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사업, 정부지원위원회 설치, 관련시설설치 및 지원, 국제처리, 발칙 등 총 5장 3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기대되는 점을 살펴보면 우선 대회준비 및 운영을 총괄하는 조직위원회 설립근거 마

련, 국가나 지자체가 행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사업목적달성과 기금마련을 위한 기부금 모집 및 수익사업 가능, 대규모 청소년이 참여하는 국제행사의 안전대책 수립, 대회관련 예산확보 용이,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마련, 대회관련 주요현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업용이, 대회관련 시설설치 용이 및 예산지원 근거 확보, 새만금 조기개발 및 SOC 확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발의된 잼버리 특별법안은 조만간 소관 상임위원 여성가족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그러나 숙려기간(20일 이상), 입법예고(10일 이상)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상임위 임기가 마감되는 5월 중에 심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6월 지방선거와 상임위원 재구성 등을 감안할 때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전북도는 상임위 법안 심의일정 지원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부처 및 국회의원 사전설명회, 예상 질의답변서 작성, 쟁점조항에 대한 논리개발 등에 치중하여 9월 정기국회에 법안 심의를 마무리하고, 연내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유치한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는 5만 여명의 세계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가 대거 참석하는 국제행사로서 국가적으로 6조 7천억원, 전북에는 3조 7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전북연 분석)가 기대되는 대회다. /김진성 기자

정부 "6월말까지 공공분야 갑질근절 대책 수립"

국무조정실 범정부 회의서

정부가 올해 6월말까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법무부 등 43개 부·처·청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2차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 방안이 논의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회의에서는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 사례와 유형, 실태조사 방안, 부처별 갑질근절 과제와 대책 등이 논의됐다.

그 결과 각 부처들은 ▲법령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한 갑질 사전예방 ▲갑질 조기적발 시스템 마련 ▲처벌 및 관리자 책임 강화 ▲피해회복 지원 등에 대해 단계별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또 추후 국민제안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이를 토대로 1~2차례 추가 회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종합적인 공공분야 갑질근절 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갑질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생활 속 적폐'라며 "우선 공직영역부터 노력해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그 효과를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논·서술형 평가체제 도입할 터"

서거석 교육감 예비후보

6월 13일 지방선거 전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서거석 예비후보는 "논·서술형 평가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예비후보는 지난 30일 전북도교육청에서 회견을 열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교육제도는 논·서술형 평가체제인 IB 도입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IB는 스위스 비영리교육재단 IBO에서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IB본부가 인증한 언어는 영어와 불어, 스페인어, 일본어 등 4개국어이다. /이삼민 기자

전 세계 약 4800개 학교에서 이 교육 방식을 도입,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예비후보는 "객관성 시험으로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수능과 달리 학생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단계별 서술형 교육프로그램으로 객관성·공정성·신뢰성까지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교육방식으로 선진국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9개 교육청이 IB 도입을 위한 검토에 들어가거나 외부 용역으로 IB 관련 연구에 돌입한 상황이다"며 "(교육감)당선되면 IB 도입을 위한 시범학교 선정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적극적인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삼민 기자

전주시 공고 제2018-603호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재공고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결과, 반영한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가.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명 세분	위치	제반 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여실지구	자연해곡지구	전주시 여의동 1203번지 일원	-	중/26,688	26,688	금의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여실지구	전주시 여의동 1203번지 일원	-	중/26,688	26,688	금의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계계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1)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2)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2. 공람기간: 신문공고 익일로부터 14일간(공휴일 제외)
3. 공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처: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 (전화 281-2418, 팩스 281-2619, 이메일 sarang44444@korea.kr)
4. 관련도서: 실용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서 및 도면은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5월 1일 전주 시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